

대학, 공대분관 · 대학원 지원 · 계약학과로 해법 모색

1면 ‘공대 인프라’에서 계속 →

학부연구생 A씨는 “아직 연구실에 책상조차 없어 자택에서 원격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소재공학과 최석원(유기재료공학) 교수는 “실험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만으로도 연구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을 더 받고 싶어도 공간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공대 분관과 미래과학관 설립으로 공간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대분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미래과학관은 오는 20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설립 계획과 일정은 논의될 예정이다.

새롭게 확보되는 공대분관과 미래과학관의 공간 활용 방식은 공간관리위원회와 공대 AI위원회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임재혁(기계공학) AI 위원장은 “현재 이공계열 인프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연구실 좌석과 공동 프로젝트 공간”이라며 “공동 공간에 대한 운영체계 또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곧 경쟁력”
학부생 유치에도 영향**

문제는 열악한 인프라가 현재의 연구환경을 넘어 우수 학부생을 유치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계열 간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상위권 학생



각종 실험장비만으로도 연구실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원희재 기자)

들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이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한정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학생들에게는 교육·연구환경의 차이가 대학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원장은 “입시제도가 공통과목으로 바뀌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어진 상 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가 곧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약학과와 부재 또한 우수인재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성균관 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반도체 및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통해 첨단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공학과 윤주영(전자공학) 교수는 “최근 반도체 계약학과는 장학금, 취업 연계 등의 매우 명확한 혜택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수 학부생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 또한 “아직도 기업연계

형 계약학과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이공계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교도 계약학과를 포함한 기업 연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학무부총장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계약학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첨단분야 기업들과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통해 내년 계약학과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단장 또한 “우리학교 주변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주변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공계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에 걸맞은 인력과 공간 인프라 개선이 핵심과제다.

이 학무부총장은 “공간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우리학교 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 활용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급변하는 첨단 분야 변화에 발맞춰 2년 단위로 이공계 교원 확보 기초계획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최대 6학점까지

1면 ‘학점포기제’에서 계속 →

필수과목도 학점 포기 가능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관해서는 학생별로 필수 과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밝혔다.

태 팀장은 “다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마이크로디그리의 선택과 포기에 따라 같은 과목도 졸업요건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의 학업 이력을 일일이 추적해 포기 여부를 제한하기보다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필수과목을 별도로 제한하면 학과별로 다른 이수요건을 일일이 적용해야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한을 풀면서 오히려 학생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졸업 구제 위한 재수강
기준 제한 우회 가능성도**

학점 취득을 포기한 과목은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이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초수강이 아닌 재수강으로 처리되며, 재수강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취득 가능한 최고 성적은 A0로 제한된다.

태 팀장은 “필수과목 포기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재수강 제한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재수강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성적을 받더라도 학점포기

제를 통해 먼저 학점 취득을 포기한 뒤, 같은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를 제도 악용보다는 기존 재수강 제도의 보완점으로 봤다. 신 회장은 “학생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역시 “포기 한도가 6학점으로 제한되고 재수강 시 A0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악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의 재수강생이 늘어

나게 되면 필수·인기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의 수강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충분히 합당한 우려”라며 “2학기 동안 학생 의견을 수렴해 수강신청 제도의 추가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9월 초 학점 포기 기준과 졸업요건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학사지원팀은 시행 이후 신청자 수와 포기 후 재수강 수율을 확인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